

5% 물가상승률 두고 이견... 기업 부담 ↑ vs 생활 안정화

〈경영계〉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

경영계 “영세 기업들 부담 커져”
노동계 “서민생활 더 어려워져”
최저임금 시급·월급 여부도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에서 최근 5%대 육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컸다.

경영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으며 내년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져 최소한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저임금 회의이기도 하다.

최대 관심은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 수준이었다.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료DB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대비 5.1% 올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 추이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2.9%,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으며, 올해는 5.1%로 각각 결정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2022년도 누적 물가 상승률이 8.2%인데 최저임금은 42%

가까이 올랐다”며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은 회복에 시간이 걸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안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요즘 서민들은 만원으로 밥 한끼 제대로 못 사먹는데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임금 노동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게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사용자단체는 최임위 안팎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수 있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언급해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

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결정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기존대로 시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기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달라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반발로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MZ세대, ‘괜찮은 일자리’ 워라밸로 판단

경총 1984년~2003년생 1000명 조사 응답자 50% “연봉수준 3000만원대”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일자리 선택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1984~2003년 출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세대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있는 연봉 3천만 원대 직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66.5%(복수응답)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라고 답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43.3%), ‘복지제도가 잘 된 일자리’(32.8%),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일자리’(25.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정년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뽑은 비율은 14.0%에 그쳤다.

경총은 워라밸을 추구하고, 물질적 보상보다는 개인적 시간의 확보를 선호하는 MZ세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괜찮은 일자리의 연봉 수준으로는 ‘3000만원대’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4000만원대’와 ‘5000만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27.6%, 12.2%에 달했다.

괜찮은 일자리의 지역으로는 50.7%가 ‘수도권’을 꼽았으며 ‘워치와는 상관 없음’(37.7%), ‘지방’(11.6%)을 꼽은 답변도 있었다.

또 괜찮은 일자리의 규모에 대해 29.1%는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워라밸과 실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정에 민감한 MZ세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며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일자리의 개념이 변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4대 그룹 총수·6대 경제단체장, 美 대통령 만난다

만찬 자리 함께 마련... 경제협력 의지 한미 정부-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기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 만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뿐 아니라 국내 6대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와 여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미 4대 그룹 총수 중 한 명으로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 만찬에 4대 그룹 총수와 국내 6대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양국 정상이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더 붙여 국내 경제단체장들과의 만찬 자리도 함께 마련하는 것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4대 그룹은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만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미국 기업인들도 일부 자리할 것으로 보여 한미 정부-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2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1-3
- 소유주: 유준상, 정재룡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 공고인: 협성설비(주)
- 연락처: 조규준 010-9011-9304

2022. 5. 18

관리감독은 뒷전... 거짓·과장 광고 즐비

>> 1면 '규제 없는 라방'서 계속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었다.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등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 5개에서 송

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이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이 344명(68.8%)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의명을 요구한 김OO씨는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라방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 이상으로 매번기마다 매출 내 차이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규제는 결국 대기업과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적발 사례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실시간 방송이면서 동시에 인플루언서 등 규제를 받는 방송을 진행한 적 없는 사람들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호스트로 삼는데, 이들의 입을 실시간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